



동서중국브리프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본 중국

- 차례
1. 전인대 회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경제
 2. 전인대 회의를 통해 본 중국의 대외정책

2020년 중국 전인대 회의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경제 - 평가와 전망

중국연구소 소장 이흥규

1. 전인대 개최 전 중국의 정치경제 상황

- 2020년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인대와 정협) 개최 연기 자체가 사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이하 전인대) 3차회의 연기를 결정
 - 2018년 가을 개최가 예상됐던 중국공산당 19기4중전회도 2019년 가을로 연기 개최된 바 있음
 -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잇따른 정치행사의 개최 연기는 그동안 대내외에 보여준 빈틈없고 치밀한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를 훼손
- 2017년 19차 당대회, 2018년 13기1차 전인대를 통해 시진핑 권력 강화 단, 이후 미중무역전쟁에 의한 경제실적 악화로 중국 당국의 권위 저하
 - 2017년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당헌에 삽입된 데 2018년 13기1차 전인대를 통해 헌법 수정안에 삽입.
 - 2017년 19차 당대회를 통해 '영수'라는 칭호를 받은 시진핑은 2018년 헌법 수정의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 폐지로 장기집권도 가능해짐.
 -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8년 6.6%에 이어 2019년은 6.1%를 기록. 이는 천안문사건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중국 제조업 일자리가 소멸. 특히 저소득층 농민공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

- 2019년 6월부터 계속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중국 내 애국주의를 조장 단, 중국 당국은 30년 전 천안문 운동의 기억 삭제에 집중
 - 2019년 6월, 홍콩에서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법 철회' 명목으로 시작된 이 시위의 본질은 사실상 2014년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의 재현인 홍콩 시민의 홍콩 민주화 운동.
 - 중국 당국은 서구제국주의의 홍콩침략이라는 서사를 통해 중화민족주의 및 애국주의 분위기를 활용하여 홍콩의 시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장
 - 그러나 2019년 6월 천안문 30주년에 대해서는 어느 때 보다 강력한 통제를 통해 정치적 기억의 삭제에 주력

- 2019년 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사태로 중국 당국의 권위가 더욱 저하되고 경제적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
 - 중국발 코로나 19 확산은 중국 당국의 언론통제와 경직된 관료시스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 부재 등 중국 정치체제의 문제점을 노출
 - 우한 봉쇄령 등 강력한 통제와 격리로 두 달 만에 '코로나 19' 대유행에서는 벗어났지만 중국인들은 일상의 철저한 봉피를 경험
 - 코로나 19 사태 3개월 만에 우한을 방문한 시진핑을 코로나 19 극복의 영웅으로 띄우려는 풍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커졌음.
 - 더욱이 중국의 2020년 1분기 GDP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 6.8%로 이는 문화대혁명 말기였던 1976년을 제외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
 - 2020년 실업률이 2월 6.2%, 3월 5.9%, 4월 6.0% 등 2019년 12월의 5.2%에 비해 무려 0.7%~1.0% 이상 높은 수준

2. 전인대에서 나타난 정치경제 주요 이슈와 평가

가. 중국 당국의 경제 상황 인식과 대응 정책 제시

- 중국은 코로나 19 사태로 현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사상 초유의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

- 중국 당국은 매년 양회에서 연내 경제성장을 목표를 먼저 공표해 왔음. 그러나 올해 양회는 구체적 수치 언급 없이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식의 추상적 목표만 제시
 -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서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였음을 솔직히 밝혔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적인 불확실성이 무척 커져 향후 성장률 예측이 어려움도 토로
 - 이는 사실상 2019년 12월에 2020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 목표로 제시했던 6.0% 이상의 지표 도달이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
- 중국 당국은 취업안정과 민생보장 그리고 빈곤퇴치에 주력한다는 입장
 - 중국은 전인대에서 취업,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체인망, 기층행정 운영 등을 잘 보장하자는 6가지 보장(6保) 개념을 강조하며 취업과 민생을 슬로건의 최우선에 배치
 -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올해 도시 신규 일자리 900만 개 창출, 실업률 6%(등록 실업률 5.5%) 달성을 제시.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해 창출한 신규 일자리 1352만 개보다는 452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 수치
 - 중국 당국은 농촌 빈곤인구의 1109만명 감소, 빈곤발생률 0.6% 등의 치적을 내세우며 이후 최저생계보장 강화 등 빈곤퇴치 지속을 강조

나. 코로나 19 방역과 사회 안정

- 코로나 19 방역 성공을 과시하면서도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시사
 - 중국 당국의 엄격한 관리통제가 중국의 코로나 19 방역 성공의 비결임을 내세우며 이는 시진핑 중심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자평
 - 그러나 코로나 19 방역과정에서 공중보건위생, 응급관리 등의 취약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실사구시와 공개·투명성 원칙 견지를 강조
 - 방역 과정을 직접 가리킨 것은 아니었지만 관료주의와 부패 문제도 거론
- 중국 당국은 전염병 예방통제체제 개혁을 강조하고 기본 의료체제 개혁도 구체적으로 제시
 - 공중보건위생 체계의 강화를 명시
 - 특히 전염병 직통보고 및 조기경보시스템 보완 등 투명성 제고를 강조
 - 공립병원의 종합개혁 심화,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능력 향상, 인터넷이 결합된 의료체제 등 다양한 의료체제 개혁 방안도 제시

다. 중국판 뉴딜, 양신일중(兩新一重)

-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의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의 전용채권 발행을 통한 SOC 건설 투자를 제시
 - 이러한 방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과를 본 방안으로 당시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국내 총생산 대비)을 0.6%에서 2.2%로 대폭 상향해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했던 경험을 보유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는 3.6%라는 사상 최대 재정 적자 비율을 제시하여 지난해 2.8%보다 0.8%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3%를 처음 돌파
 - 재정 투입 방향은 신형 SOC, 신형 도시화, 중대형 토목공사(교통, 수리) 등 이른바 ‘양신일중’(兩新一重) 분야

- 특히 신 SOC 건설은 주로 이른바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중국의 미래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확대와 직결된 분야
 - 신 SOC 건설은 5G인프라, AI, 산업인터넷망, 빅데이터센터, 특고압, 고속철도 및 궤도교통, 전기차 충전소 등이 주력 분야
 - 신 SOC 분야로의 재정투자 확대는 올해 제시될 2021~2025년 기간의 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계획)의 방향과도 맞아떨어지는 것
 - 신 SOC는 기술굴기라는 중국의 미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이며 누구나 사용하는 첨단 제품의 영구적인 소비와도 직접 관련되며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는 분야
 - 신 SOC 건설로의 재정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 혁신형 국가 건설이라는 국의 중장기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

라. ‘홍콩 보안법에 관한 결정’

- 전인대의 결정으로 이른바 ‘홍콩 보안법’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
 -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건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하 홍콩 보안법에 관한 결정)이 압도적인 표차로 표결 통과됨

- 전인대 대표단 2885명 참여에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은 6표
- 따라서 향후 '홍콩 보안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제정 절차를 거쳐 발효될 것인데 7월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홍콩 보안법에 관한 결정'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수시로 홍콩의 자치를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음
 -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금지
 - 국가 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 처벌
 - 국가안보 교육 강화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부 등 국가안보 기관을 홍콩에 설치
- 중국 당국이 '일국양제' 원칙에 위배 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홍콩 보안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킨 것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보았기 때문.
 - 중국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환경도 악화되어 어차피 내수 위주의 경제 운용으로 대외적 비난 여론의 영향이 최소화된 시점
 - 9월6일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는 홍콩 민주파의 압승이 예상되어 향후 홍콩 자체적인 보안법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

마. 민법전 제정

- 민법전이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
 - 중국의 민사 법률 규정을 총망라한 이번 민법전은 총칙,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권리침해·책임편, 부칙 등 총 8장, 1260개의 조목으로 구성
 - 2021년 1월1일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등 각종 개별 민사 법률들은 모두 폐지
- 중국의 민법전 제정은 시장화 개혁 이후 중국 국민의 개인 권리 특히 인격권과 재산권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 총괄한 법률체계를 구축한 것
 - 중국 민법전의 가장 큰 변화는 독립적인 인격권 편의 신설로 이는 중국 국민 개인 인권 법률을 보다 보완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

- 임차권 이외에도 타인의 주택을 무상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거주권을 신설하고 물권법 (2007)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였음.

바. 기타 정치적 동향

-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強) 사이의 노선 갈등 양상이 노출
 -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시해온 빈곤 탈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혀 전면적인 소강사회 달성을 약속한 시진핑 주석의 1월 신년사를 부정한 셈
 - 작년 5월 리커창 총리의 산둥 시찰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주민의 분노가 그대로 관영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중국의 정치적 관행으로는 이는 지도부 내의 갈등을 의미.
 - 리커창 총리는 노점상을 장려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경제를 진작하자라는 차원에서 '노점경제'의 활성화를 주창.
 - 그러나 베이징시는 즉각 노점경제가 베이징의 미관을 해친다고 반박했는데 베이징시 당서기 차이치(蔡奇)는 시진핑의 최측근
 - 곧이어 인민일보, CCTV 등 중앙매체들도 노점경제에 대한 우려 표명, 이를 관장한 당 중앙선전부장도 시진핑의 최측근인 황쿤밍(黃坤明)
- 양회를 앞두고 '리틀 후진타오'로 알려진 후춘화(胡春華) 정치국원 겸 부총리의 활발한 지방 시찰 동정이 관영 언론에 자세히 보도됨
 - 후춘화 부총리는 4월 중순부터 5월10일까지 광둥(廣東), 후난(湖南), 신장(新疆), 허난(河南), 산둥(山東), 지린(吉林) 등 6개 지역 농촌을 순회시찰하고 양회 직전인 5월18일에는 허베이와 베이징에 걸쳐 있는 숭안신구(雄安新區)를 시찰.
 - 후춘화는 한 달 동안에 중국의 7-8개 성(省)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일정을 소화했고, 인민일보 등 관방 매체가 양회 직전에 잇따라 보도
 - 더욱이 후춘화의 지역 시찰 목표가 농업생산, 빈곤 퇴치, 식량 안전, 방역, 도시화 등 국가전략의 주요 목표를 망라한 점도 주목됨.

3. 전인대 국면 이후 중국의 정치경제 전망

- 본래 시진핑 정권이 2020년까지 약속한 ‘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全面建成小康社会)의 세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
 -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GDP 2010년 대비 2배 제고’라는 목표 제시
 - 2020년 성장률을 최소 5.5% 달성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 따라서 이후 3분기 동안 평균 9.9%의 성장률이 요구되나 이는 현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

- 결국,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진 중국의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의 관건은 실업 문제의 해결이나 낙관적 전망이 어려움.
 - 일부에서는 중국의 실제 실업률이 20.5%로 실업자가 7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는 등 중국 정부가 도시실업률 6% 내 달성과 도시 일자리 수 900만개 창출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
 - 중국 당국은 중국판 뉴딜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고 대졸자의 군 입대나 대학원 진학 장려 등 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것
 - 농민공 등 저소득층의 실업난이 가중될 전망이지만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사회적 불안정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의 위기’에 대해 중국 당국은 언론 통제는 계속하되 기층 거버넌스 능력 향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할 것임
 - 코로나19의 발생을 알린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죽음 등을 계기로 SNS와 매체에 대한 검열과 통제 완화 등 언론의 자유 요구가 높아졌으나 중국 당국이 언론 통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치적 리스크가 커짐
 - 따라서 중국 당국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행정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적 신뢰 회복을 도모하면서 교육, 의료, 치안 등 기층의 주요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사회 안정을 도모

- 애국주의는 사회적 불만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유용한 카드가 될 것
 - 홍콩 보안법에 관한 결정은 애국주의를 활용해 국내 사회 불만의 시선을 홍콩으로 돌리려는 목적도 있음.

- 향후 계속될 미중무역전쟁, 홍콩 시위, 코로나19 재발 등의 국면에서 중국 당국은 애국주의 여론을 환기시켜 사회 압력 해소를 시도할 것
- 2020년 가을에 열릴 중국공산당 19기5중전회가 향후 정국 변화의 관건적 시기가 될 전망
 - 19기5중전회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완성과 빈곤퇴치 완료를 선언하려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마지막 기회
 - 19기5중전회는 14차5개년 계획(2021-2025) 내용을 확정짓는 회의인 만큼 향후 개혁 방향을 둘러싼 노선 갈등의 결말이 나타날 것
 -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시진핑에 대한 원로들의 정치적 탄핵이 진행될 경우 19기5중전회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중국 전인대 회의를 통해 본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

동아시아 연구원장 신정승

1.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개최

- 2020.5.21.-28간 개최
 - 코로나 19로 인해 2개월 반 지연 개최, 기간도 1주일로 단축
- 핵심 내용은 5월 22일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화상 기자회견(5.28)과 왕이 외교부장의 화상 기자회견(5.25)
 - 정부업무보고의 분량은 2019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서 주로 경제사회 분야 정책에 대한 내용, 코로나 19 대처와 경제회복 노력에 상당 부분 할애
 - 대외정책 관련 부분은 주로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

2. 전인대 개최 전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

- 코로나 19로 인한 인명, 경제적 피해 상당
 -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영도하에 후베이성 봉쇄 등 강력한 조치로 조기 통제에 성공했다는 점을 부각
- 코로나 19의 발병과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중국 비판
 -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코로나 방역경험과 방역물자 지원을 통해 중국의 국제사회 기여를 홍보
 - 코로나 19의 발생과 확산이 중국 책임이라는 논리를 거부하고, WHO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

- 미국의 대중국 압박 증가
 - 1월 미중간 무역 1단계 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산업보조금 문제를 일본, EU와 함께 제기
 - 미국은 "대 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5.20)에서 원칙에 따른 현실주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의지를 명확히 천명
 -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 활동 강화,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대중국 수출 제한 움직임

3. 전인대에서 나타난 주요 이슈별 중국의 입장

가.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중국 정부의 대응

- 글로벌화는 세계발전과 인류 진보를 촉진하는 필연적 추세라고 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반글로벌화(디커플링)를 우회적으로 비판
 - 글로벌화를 거절하고 보호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전도가 무망한 일
 - 앞으로 다자주의가 더욱 존중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여 WHO 등 각 전문기구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토록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과 개선 필요
- 코로나 19의 장기화 상황에서 금년도 중국 외교의 5가지 중점 제시
 - 각종 외교자원을 활용, 국제 산업체인과 공급체인 안정, 무역투자의 자유화, 원활화 촉진 등 국내발전전략에 기여
 - 국가주권, 안전과 발전이익 수호, 외부세력의 내정간섭 음모 방지
 - 동반자 관계의 부단한 심화, 대국관계의 안정(穩中有進)
 - 다자주의 수호, 세계적 공공위생 거버넌스 촉진, WHO의 역할지지, '인류 위생건강 공동체' 구축
 - 일대일로 위생협력, 건강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국제협력의 적극 확대
- 강군사상 강조와 국방 예산의 증액
 -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와 시진핑 강군사상 강조
 - 국가 핵심이익 (주권, 안전, 발전)의 확고한 수호 의지 천명

- 정부 예산안에 2020 국방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작년 7.5% 증가) 1조 2,680억 위안 (약 1,800 억불)
 - * 무장경찰 등 군과 유사한 조직체에 대한 예산 등을 합치면 실제로 2,400~2,600 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평가 (스웨덴의 SIPRI, 영국의 IISS 추정)
- 외교부 등 다른 기관들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미중갈등 시기에 군사굴기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 가능

나. 미중관계

- 미국에 대해 비교적 절제된 비판
 - 코로나 19와 관련 거짓말과 음모로 중국을 비난하는 정치 바이러스가 미국 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 표명, 아울러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미중 간 ‘신냉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해 비판
- 미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재천명
 - 중국은 미국과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 (신형대국관계)의 정신으로 협력적이고 안정적인 중미관계 건설하기를 희망
 - 그렇지만 중국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 정당한 발전권리(핵심이익)와 더불어 중국인들이 어렵게 이룬 지위와 존엄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

다.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입장 반복

- 홍콩 보안법(安全法) 제정에 대한 정당성 주장
 - 홍콩 업무는 중국내정으로서 내정불간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인 만큼 어떤 나라도 간섭 불가
 - 국가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중앙정부가 필요시 관련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국가주권 이론과 원칙에 부합
 - 홍콩의 본토로부터의 분리세력이 증가, 외부세력의 불법적인 간섭 등으로 중국 국가안전에 엄중한 위해 초래, 따라서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타이완 문제 개입에 대한 경고
 -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서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정치적 기초
 - 방역협력을 구실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어 타이완의 국제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에 굳건히 반대 (WHO 옵서버 자격 가입 문제)
 - 양안 통일은 역사적 필연, 미국이 타이완 문제의 고도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간 3개 공동 코뮤니케를 지킴으로써, 중국의 레드라인에 도전하여 14억 중국인의 국가통일을 위한 굳건한 결심을 오관하지 말라고 경고

라. 글로벌 거버넌스와 일대일로 추진

- 국제사회와의 협력 재천명
 - 공중위생의 위기와 경제의 심각한 쇠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인류 위생건강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
- 코로나 19 발원 국제적 조사에 대한 조건부 동의
 - 중국은 국제과학계의 코로나 19 발병 원인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개방적, 이 과정에는 반드시 전문성, 공정성과 건설성을 견지할 필요
 - 즉, WHO가 주도하고 과학자와 의학전문가가 전 세계에 걸쳐 연구를 진행 (전문성),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공정성), WHO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고 국제적 방역협력에 기여, 전세계적 공공위생 체제와 거버넌스 능력을 개선시키는데 유리해야 (건설성) 한다는 전제
- 일대일로 추진전략의 일부 조정 가능성 시사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 부분적으로 일대일로 추진에 영향
 - 코로나 19 이후 각국의 경제발전, 민생보장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질 것이며, 공공위생 분야에서 협력 요구는 대폭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건강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적극 추진 언급

- 특히 리커창 총리는 질 높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시장의 원리와 국제적 규칙에 따라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시켜 공통의 이익에 기반한 협력 전개 천명

마.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추진

- 한중일 관계
 - 3국간 코로나 19 대처를 위한 다양한 협력 중요
 - 산업복원을 위한 협력을 통해 공급체인의 안정 도모 필요, 중국은 한국 등과 편리 인원의 왕래를 위한 패스트트랙과 화물유통을 위한 녹색 통로 개설 희망, 여건이 되면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조속히 회복
 - 코로나 19 이후에 대비, 지역경제협력 수준의 제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상호 시장개방을 확대
 - 건강의료, AI 제조, 5G 등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 도모
- RCEP 년내 서명 추진

바. 한반도 문제

- 북미간 대화를 중시하면서도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
 -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앉아서 도를 논한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동하는 것이 더욱 필요 (既要“坐而论道”, 更要“起而行之”)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방안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쌍궤병진이며, 단계적이고 행동대 행동 방식에 따른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 반복

4. 전인대에서 천명된 금년도 중국 대외정책 평가

- 코로나 19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왕이 부장의 금년도 외교중점에서 첫 번째로 언급
 - 과거 덩샤오핑 시절 중국의 국방, 외교가 경제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한 것과 유사

- 이런 맥락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
 -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는 필연적 추세라고 언급, 미국의 디커플링 움직임을 견제
 -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도

-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 어려움을 감안,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면서 자신의 핵심이익 수호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
 - 리커창 보고나 왕이 기자회견에서 절제된 가운데 우회적으로 미국을 비판하면서, 미국과 신형대국관계에 따라 상호존중과 공영의 관계 발전 희망
 - 미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은 리커창 총리가 아닌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

- 그러나 중국의 주권, 영토의 안정, 발전이익을 건드려 레드라인을 넘을 시에는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
 - 이 표현은 과거에도 계속 등장했던 것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금년에는 홍콩 보안법과 타이완 문제를 두고 강하게 언급

- 홍콩 보안법은 기존의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관찰
 - 시진핑으로서는 2019년 격화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소강상태에 있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민주화 세력이 다수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여 강행한 것으로 관찰
 - 미국은 중국이 일국양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다른 서구국가들과 연계하여 중국에 대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 실제로 홍콩에 대한 무역과 투자에서의 특수지위를 철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실제로 집행할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약간 톤다운, 보건 위생 분야를 강조
 - 미국 일방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법에 따른 질서 재언급,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표명
 -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인류 위생건강 운명공동체 구축을 새롭게 제시

- 일대일로 사업도 인프라 건설 위주에서 보건 위생분야 등 약간의 변화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다소 후퇴된 것으로 평가
 - 2019년 전인대 기자회견시 왕이 부장이 총체적 로드맵 작성과 더불어 단계적이고 동시적 이행, 검증 방안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차이
 -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적 대처 우선 필요성에 따라 북핵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관찰
 - 한국으로서는 정상회의 등 기회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할 필요

- 한국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의 조기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서의 약한 고리로 생각, 대체로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하반기 방한을 적극 추진 (보건위생 협력, 경제협력 확대, 한한령 해제 등 가능성)
 - 최근 사드 장비교체 시에도 원론적 수준에서 항의
 - 그렇지만 향후 한국의 미국 주도 경제변영네트워크(EPN) 참여에 대해 견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